

지리산·월출산 케이블카 찬반 공방 가열

지자체 “관광수입·지역경제 위해 필요”

환경단체 “생태계 파괴·지역사회 분열”

지리산과 월출산 등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중인 가운데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간의 찬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립공원케이블카반대 광주·전남 시도 민행동’은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의 생태경관을 파괴하며, 지리산 주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케이블카 건설계획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생태환경적 측면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시설임은 설악산, 내장산, 덕유산의 사례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케이블카가 지역을 살릴 것이라는 환상, 지자체와 지역 토건 세력의 ‘물지마 개발’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리산과 월출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구례군과 영암군, 그리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전남도를 규탄한다”며 “지금 전남

도가 할 일은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하는 일 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산인 국립공원 보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날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중인 지리산과 2개 광역자체(경남, 전북) 환경단체들도 “지리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반면 전남도의회에서는 월출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손태열(영암1·민주)의원 등은 “월출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에서 “관광소득 증대와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월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자연경관만 훼손됐고 지역경제 과급효과는 미미했다”며 “케이블카 설치가 오히려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고 관광수입도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 온 구례 지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공원 산도(索道) 사업’으로 케이블카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리산(남원, 함양, 산청, 구례), 월출산(영암), 설악산(양양), 한려해상(사천) 등 전국 4개 국립공원 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성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추진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영산강환경청, 내일 병풍산서 밀렵도구 수거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21일 “겨울철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와 밀렵 방지를 위해 장성군, 상무대포평학교,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등과 함께 오는 23일 장성군 북하면 병풍산 자락에서 읊모, 몇 등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설치해 놓은 밀렵도구로 인해 등산객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야생동물들이 겨울에 며칠이 부족해 경계를 주변까지 내려오면서 겨울철에 밀렵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영산강환경청은 최근 3개월간 17차례의 현장 단속을 실시해 밀렵사범 5명을 적발, 관할 경찰서에 인계조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008년 88명이던

광주·전남 지역 밀렵사범이 2009년 73명, 2010년 40명, 2011년 11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균절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수거한 염구가 109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수거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최근에는 이 같은 밀렵도구로 인해 등산객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성이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밀렵의 방법 등이 날로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다”며 “밀렵·밀거래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는 야생동물들이 겨울에 며칠이 부족해 경계를 주변까지 내려오면서 겨울철에 밀렵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영산강환경청은 최근 3개월간 17차례의 현장 단속을 실시해 밀렵사범 5명을 적발, 관할 경찰서에 인계조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008년 88명이던

고로쇠 수액 무허가 채취, 벌금 1500만원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시기를 맞아 지나친 수액 채취에 따른 수목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21일부터 한 달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로쇠 불법 수액채취, 관리규정 미준수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면서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년 채취 전에 채취 기술 및 사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액을 채취할 때는 수액채취원증을 달고 지표면에서 2m 이내 높이에 지름

0.8cm 이내, 목질부로부터 1.5cm 이내의 구멍을 뚫어야 한다. 나무 가슴높이 지름크기가 10~19cm는 1개, 20~29cm는 2개, 30cm 이상은 3개의 구멍을 각각 뚫을 수 있다.

수액채취기에 사용되는 호스는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무색무취한 음용수관으로 2종관을 사용해야 하고 설치 후 5년 이상 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허가받지 않고 수액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연합뉴스

中 동북 62년만에 최악 겨울가뭄

강수량 예년평균 73% 적어… 주민 242만명 식수난

전체 식량 생산량 25% 차지, 곡물수확 차질 우려

중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동북지역이 62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을 겪고 있어 곡물 수확率 차질이 우려된다.

20일 중국나디오방송 인터넷판인 중국광파망(廣播網)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간 헤이룽강(黑龍江), 지린(吉林省), 라오닝(遼寧), 네이멍구(內蒙古) 등 동북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4.2mm에 불과했다.

국가기후센터 왕잉광(王永光) 연구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지금까지 동북지역에 내린 눈이나 비가 예년 평균보다 73%나 적었다”며 “62년 만에 가장 적은 강수량”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흐린 날씨로 인해 겨울철 평균 기온도 예년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수분 증발량이 많아 농경지 가뭄이 더욱 심했다. 입춘(2월 4일)과 우수(2월 19일)가 지나면서 본격적인 영농 채비를 해야 하지만 혹심한 가뭄 탓에 이 지역 농민들은 파종 시기조차 잡지 못한 채 농업용수 확보에 애를 태우고 있다.

동북지역은 중국의 옥수수와 콩의 주산지며, 헤이룽강은 세계 3대 미국창고로 불릴 만큼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꼽힌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25%를 차지한다. 가뭄으로 동북지역 곡물 수확率 감소하면 중국뿐 아니라 국제 곡물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남서부지역의 밭작물 주산지인 윈난(雲南)에도 3년 연속 겨울 가뭄이 닥쳤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윈난의 강수량은 31mm에 불과했다.

수원 고갈로 242만여 명의 주민과 155만 마리의 가축이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다. 스린(石林)현의 저수지가 2개월 전부터 갈라진 채 바닥을 드러내는 등 상당수 저수지의 물이 고갈돼 용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파종한 콩과 보리가 타들어가고 있으나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는 실정이다.

중국에서 농산물 가격은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연평균 5% 이상을 기록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농산물과 육류 가격 상승이 꼽히고 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는 중국의 CPI 상승률이 3%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곡창지대인 동북과 남부지역 겨울 가뭄이 물가 안정을 해치는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U, 선박에도 탄소세 부과 추진

기후변화 방지·후진국 지원자금 마련… 산업·기업까지 확대